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2023.11.20-26

No.730



윤 대통령 APEC 첫 참석
'주52시간 근무제' 국민들의 생각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서포터즈 뒀다
'전세지옥' 쓴 91년생 최지수의 꿈



보이스피싱 범죄 꼼짝마!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안정엽 경위

엑스포 참가하러 왔소이다.

I'm here to participate in the EXPO.

대한민국과 세계박람회 맨 처음 인연은
1893년 시카고박람회의 '조선관' 설치였습니다.
130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엑스포 사랑.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응원해주세요.

- 2023.4.2~7 BIE 평가단 방문 (인프라 및 유치열기 등 평가)
 - 2023.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 2023.11월 개최국 선정 투표 (181개 회원국 비밀투표)
- 올해 2023년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기원하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애증의 OTT



박진영

금융·경제 콘텐츠를
26만 MZ세대에게
매일 아침 이메일로
전달하는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2030 경제 미디어 ‘어피티’는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말부터 건넵니다. ‘고정비’는 대출 이자, 통신비, 보험료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뜻해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고정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는 ‘변동비’가 있어요. 외식비, 쇼핑비 등이 대표 사례예요. 내가 줄이려고 마음먹으면 줄일 수 있는 변동비와 다르게 고정비는 줄이거나 없애기 어려워요. 그런데 고정비에 새로 들어온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유료 구독 서비스예요. ‘쿠팡와우’ 등 쇼핑몰 멤버십,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부터 MS 오피스365, 어도비 등 업무용 도구까지 유료 구독 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예요.

이렇게 구독 서비스로 이뤄지는 경제를 ‘구독 경제’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구독 경제 시장이 2025년 1조 5000억 달러(약 2004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유료 구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가정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구독 경제 시대에 앞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한 예로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자동차 열선시트와 운전대 온열 기능 등에도 유료 구독을 도입하려고 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하드웨어를 ‘옵션’으로 추가하면 그만이었습니니다. 결국 완성차 기업의 계획에 소비자들은 반발했고 회사는 계획을 철회했어요. 얼마 전 미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구독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하드웨어는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요즘 특히 화제가 되는 유료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OTT예요. ‘있으면 좋은 것’이었던 OTT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한동안 넷플릭스가 OTT의 대명사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양한 OTT가 등장했고 이제 OTT 구독은 ‘높아진 삶의 질’, ‘여가생활의 뉴노멀’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로 자리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OTT의 대안으로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OTT 월평균 구독료가 1만 원대인 걸 감안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다른 소비재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면 대체재로 갈아탈 수 있지만 OTT는 콘텐츠가 잘 겹치지 않아 현명하게 소비하기 어려워요.

두 개 이상의 OTT를 구독하는 ‘다중구독(Multiple Subscription)’이 많은 이유입니다. 2020년엔 OTT를 가구당 약 1.3개 구독했는데 2023년에는 2.3개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가 멤버십 가격을 올리고 계정 공유를 전보다 어렵게 바꿨죠. 국내 OTT도 가격 인상 타이밍을 엿보고 있고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 vs ‘고물가에 지갑을 더 얇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고정비’. 아직은 저울이 팽팽하지만 OTT를 진짜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모처럼 바닷가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설렘을까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 되면 바닷가에 가서 일출을 보자고 했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를 볼 수 없었던 그 시간 동안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오순환의 '바다'는 일출을 바라보는 부부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가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동화처럼 그려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수평선에서 붉게 떠오르던 해는 지상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황금빛으로 바뀝니다. 수평선도 바다도, 창가에 드리워진 흰색 커튼도 모두 황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부부의 옷과 머리카락까지 황금색으로 일렁입니다. 두 사람의 눈동자에도 황금빛이 어른거릴 것입니다. 아내의 어깨를 감싼 남편의 머리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같이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편안한 부부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고운 모습으로 함께 늙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정욱 미술평론가



2008 오순환

오순환, '바다', 캔버스에 아크릴, 116.8×80cm, 2008년



2023.11.20-26
No.730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년 11월 20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커버스토리

보이스피싱범죄 꼼짝마!

06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안정엽 경위의 '1490억' 피싱 조직 소탕작전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를 가다



표지사진 C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정책 돋보기

세대공감 MZ세대의 생각
01 박진영
'애증의 OTT'

공감갤러리
02 오순환
'바다'

APEC 정상회의
16 윤 대통령 첫 참석 기조연설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 최우선 협력과제로"

지금 용산은
22 "근본적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줄 것"

알쓸정책
26 '그냥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복귀 지원에 1조 투입 외

돈 되는 정책
30 놓치면 안될 '연말정산' 개정 세법

휴게실 라운지
31 박진 외교부 장관 외

이슈
32 대학개혁 선도할 '글로벌대학' 10곳 첫 선정



포커스

34 '주 52시간 근무제' 국민들의 생각은?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36 2023년 사회조사...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58.1%

더 든든하게, 국민 속으로

38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K-피플

4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서포터즈 2기 정하늘·오민기

국방

46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7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유

문화정책

48 영상콘텐츠 산업 2027년 40조 원 규모 육성

탄소발자국 따라가기

50 무공해차만 출입!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에코캠핑

숨은 국대 찾기

53 '전세지옥' 쓴 91년생 최지수 작가

웹툰 임남택 변호사의 공감하는 법

56 연말정산 꿀팁

몸건강 마음건강

57 건강검진만 받으면 아무 소용없다

여행

58 이런 곳이 명품숲길! 서울 안산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 가보니

함께 즐기다

62 수능 끝! 전주로 도서관 여행 떠나볼까 외
다큐멘터리 '무경계' 진재운 감독 인터뷰

64 독자 공감

 1490억 피해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안정엽 경위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잡히는 범죄!” ‘경제 살인’ 끝까지 추적할 것”

국립대 교수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사는 A씨의 계좌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돼 공범으로 곧 구속될 거라고 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112에 신고했다. 112를 통해 연결된 검찰에선 수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A씨는 “정상 자금인지 확인하겠다”는 검사의 말에 따라 현금 2억 원을 인출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를 해서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인데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넸다. 금융감독원 직원은 A씨에

게 “금융권 내 범죄 조력자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 대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A씨는 8억 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건넸다. 돈을 전달받은 뒤 이들은 연락이 끊겼다. A씨는 뒤늦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5년간 A씨를 포함해 1891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검거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피해액은 총 1490억 원. 보이스피싱 단일 조직으로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들 조직은 2017년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만든 뒤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해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 상당수는 대기업 직원, 교수, 의사 등 고소득·고학력자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위조된 서류와 신분증, 검사 사무실을 영상통화로 보여줘서 속았다”고 진술했다. 영상 속 사무실에는 검사 명패와 검찰 깃발, 법복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출금까지 노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도 높은 고소득·고학력자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보안용 앱’이라고 속여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만들었다. 이 앱을 깔면 112나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가 연결된다. 중계 기기를 이용해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12년째 수사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쓰고 있는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안정엽 경위. 사진 C영상미디어



국내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해 팀 전원이 특진 대상으로 선발된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6팀.
왼쪽부터 김현준 경장, 박소연 경사, 안정엽 경위, 최석용 경장, 사진 충남경찰청

전화를 가로챈 것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자기 손으로 경찰, 검찰에 전화를 걸었으니 속을 수밖에 없었다.

역대 최대 피해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안정엽(42) 경위가 이끄는 반부패수사대 6팀은 20개월간 매달렸다. 실체를 찾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음성파일을 받아서 피싱 목소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문(聲紋, 목소리 지문)을 분석해 조직 특징과 여죄 수사에 활용했다. 약 7만 쪽에 달하는 전국 수사기관 자료와 피해사실 수사기록도 분석했다. 치밀한 추적 끝에 반부패수사대 6팀은 10월 말 이들 조직의 한국인 총책과 콜센터 조직원 4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8일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6팀 전원이 특별승진 추천 대상으로 선발됐다.

안 경위는 2013년 ‘김미영 팀장’이라

는 이름으로 금융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해 특진한 데 이어 또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며 특진 대상자가 됐다.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만 12년째. 안 경위는 오늘도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직 기빠하긴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시다. 아직 못 잡은 일당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남은 조직원들을 반드시 검거해야 합니다.”

남은 일당을 추적 중인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를 특정해 추적·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 있는 남은 일당 중 일부를 추적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상태다.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낼 계획이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

은 5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이 많다. 그걸 생각하면 추적을 멈출 수 없다.

이번에 검거한 조직의 범죄 규모가 상당하다.

애초 피해자가 130여 명(피해금 200억 원대)으로 파악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미제사건이 이들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피해자가 확 늘어났다. 우리가 밝혀낸 1891명의 피해자와 1490억 원의 피해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수사력을 아무리 집중해도 이들 조직의 모든 범죄를 밝히기는 어렵다. 범죄 건수도, 피해자 수도 실제로는 7~8배 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 특정하지 못해 아쉬울 뿐이다.

피해 금액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41억 원, 24억 원, 18억 원, 10억 원... 피해자 1명당 속아서 건넨 금액이 이렇게 많다. 이들 조직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송금하게 했다. 한 사람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게 했다. 대출이 유리한 고소득·고학력자를 타깃으로 한 만큼 피해 금액도 컸다.

의사, 교수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들 조직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시나리오와 첨단기술로 피해자를 속인다. 특히 피해자에게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이 이뤄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장악한다. 이때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에 전화를 걸어도 모두 조직원과 연결된다. 위조된 서류와

신분증, 검사 사무실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기까지 하니 의심을 거두게 된다.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가한다.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다.

수법이 치밀하다.

보이스피싱은 더욱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기업화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는 지능적·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번에 검거한 조직은 하루에 3시간씩 범죄 수법을 강의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학 교수를 초빙해 강의까지 했다. 조직 내에서 성비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감수성 교육도 실시할 정도다. 능력 있는 조직원을 스카우트해 범죄를 더욱 치밀하게 벌인다.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 수거책을 검거해도 관리책이나 총책과 접점이 없어 실체를 추적하기 힘들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돈은 빠르게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다. 조직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다. 국가 간의 공조가 없이는 조직을 특정하고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첩보나 내부고발자, 자수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경우

도 있지만 한정적이다.

그래서 이번 성과가 더욱 놀랍다.

이 조직을 와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팔 하나는 반드시 잘라내자 마음먹었다. 지난해 탐을 꾸리고 탐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에 매달렸다. 밥 먹듯이 밤을 새우며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조직을 추적했다. 중국 공안의 협조를 통해 결국 총책과 관리책을 잡을 수 있었다. 최근 이 조직으로부터 18억 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특진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고 연락해왔다. 구속된 조직원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인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560명에게 108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총책이 11월 3일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정도로 벌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밥상’을 차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팀도 수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역대급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올해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만 12년째라고.

2010년 천안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검찰 수사관이라며 전화를 건 남성에게 피해자는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금방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알고 계좌번호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파출소에 피해 접수를 하고 사건을 경찰서로 이관했다. 얼마 뒤 이 사건을 담당하던 선배를 만나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냐고 물었는데 ‘보이스피싱은 못 잡는 범죄’라고 하더라.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 화도 났다. 그리고 얼마 뒤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이스피싱이 정말 무서운 범죄라는 걸 그때 느꼈다. 내가 수사를 해야겠다,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원했고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해보니 어땠던가?

처음에는 정말 좌절을 많이 했다. 보이스피싱은 정말 못 잡는 범죄구나 싶더라. 그렇게 막막할 때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다는 뉴스를 봤다. 어떻게 잡았나 알고 싶어서 경찰서에 무작정 찾아가 도와달라 읍소했다. 외부 전문가도 찾아다니고 IP 주소 추적과 네트워크 관련 자문도 얻었다.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수사 기법을 터득해나갔다.

성과가 있었나?

수사 중에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포착했다. 그가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를 노렸다. 남성은 카드를 바꿔가며 30분 동안 돈을 뽑았다. 가만히 지켜보니 혼자

“

힘들 때 특히 기억에 남는 피해자와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만두고 싶다면 경찰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이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

아니라 6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은행을 돌면서 돈을 뽑는 현금 수거 조직이었다. 잠복 끝에 이들을 덮쳤고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첫 검거였다. 그 자리에서 압수한 돈은 8700만 원이었다.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고맙다고 하는데 뿌듯했다.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범인을 찾아가는 길을 제대로 찾기로 했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을 검거했다.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조직한 뒤 ‘김미영 팀장’이라는 명의로 ‘저금리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543명으로부터 39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을 오랜 추적 끝에 2013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이 사건 때만 해도 한 명당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한 명당 평균 7800만 원에 이른다. 이전의 보이스피싱은 재산 편취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비대면 대출이 늘면서 피해자의 자산을 가로채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까지 받게 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가 많나?

최근 만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3억 5000만 원을 보냈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았다. 월급이 3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매달 내는 이자만 500만 원이다. 올해 겨우 27세. 꽃다운 나이인데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자는 어떻게 갚는다 해도 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다.

피해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겠다.

수사를 하다 보면 번아웃(탈진 증후군)도 오고 슬럼프도 온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이번 수사를 하면서 팀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힘들 때 특히 기억에 남는 피해자와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만두고 싶다면 경찰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이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나?


보이스피싱이란 범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한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속인다.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딱 이거다 하는 게 없다. 경각심을 갖고 항상 의심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을 사칭하거나 ‘서울중앙지검 ○○○입니다’라고 하면 전화를 끊어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범인의 목소리나 피해 사례를 자주 접하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스피싱은 근절될 수 있을까?

예전에는 한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중국 조선족을 수행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반대로 중국 조선족이 총책을 맡아 한국인을 수행원으로 쓴다. 조직을 움직이는 총책을 잡지 못하니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피해가 생긴다. 중국 공안이 함께 나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우선은 범행 수행 비용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범죄 수익률이 좋아야 범행도 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계를 계속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기계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범죄도 줄어들지 않을까?

앞으로 목표는?

보이스피싱 수사는 ‘추적 끝판왕’이라고 부른다. 끈질기게 추적해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 세계 보이스피싱 조직을 다 수사하는 게 목표다. 못 잡더라도 그 실체를 다 밝히고 싶다. 무엇보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기법을 새롭게 개발할 생각이다. 밝힐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다. 

강정미 기자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과수 박남인 연구사가 해당 모델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 ‘음성분석 모델’ 개발 보이스피싱범 잡는 국과수를 가다

1만 개 데이터 분석 단 6분 ‘그놈 목소리’ 잡아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소탕

“영상 합의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합의 의사 없으면 지금부터 본인 가족이랑 지인들한테 먼저 보내드릴까 하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이다. 범인은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약 70명에게 6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최근 경찰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직접 사건에 가담한 16명을 비롯해 올해 10월 말까지 붙잡은 조직원은 51명에 달한다.

이처럼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무더기로 잡을 수 있었던 데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큰 역할을 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올해 2월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여러 음성을 비교해 동일한 여부를 판별하는 데 쓰인다. 즉 범죄 혐의자의 목소리를 앞서 확보한 범죄자의 음성 데이터와 비교해 동일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됐다. AI는 약 6000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의 음성을

학습해 판별 능력을 갖췄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기술 개발에 착수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음성분석 모델을 사용해왔다. 개발에 참여한 국과수 박남인 연구사(디지털과 오디오미디어연구실)는 “이번 사건은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 단속 과정에서 검거한 조직원 5명의 목소리를 기존 범죄자들의 음성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미제 사건 범죄자까지 추가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텔레뱅킹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
-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거나 계좌 잔액조회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놔야 한다. ‘암구호’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다.
- 4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도 진위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5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이 가능한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했더라도 인터넷 교환기(중계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이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 6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누리집 주소 여부 확인**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누리집 주소가 실제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틀 걸리던 음성분석 ‘6분’으로 단축

강원 원주시에 자리한 국과수를 찾아 음성분석 모델로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는지 살펴봤다. 해당 모델은 컴퓨터에 탑재해 사용한다. 박 연구사가 실험군으로 사용할 음성파일을 선택한 뒤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자 화면에 작업 시간이 나타나면서 곧장 분석이 시작됐다. 앞서 선택한 음성과 비교할 대조군 음성파일은 무려 1만 3000개. 국과수와 금융감독원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015년부터 확보해온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분석이 완료됐다. 1만 개가 넘는 파일을 분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분’이었다. 화면에는 실험군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파일이 순서대로 나열됐다. 10점 만점인 ‘유사도’가 6.2를 넘으면 동일한 목소리로 본다. 유사도가 6.5인 음성파일을 클릭하자 실험군 음성과 매우 비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분석의 정확도, 즉 판독률은 97%에 달한다. “기준치는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그걸 높게 잡으면 분석의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분석 대상이 편협해질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기준치를 낮게 설정하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혹시라도 AI가 놓칠 수 있는 분석대상까지 수사선상에 놓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다.” 박 연구사의 설명이다.

범죄자 ‘그룹화’ 기능 세계 최초 개발

국과수는 기존에 러시아, 영국 등에서 수입한 음성분석 모델을 사용했다. 수입 모델은 한국어 판별 능력이 다소 떨어졌다. 또한 고가인 데다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해외 모델의 경우 두 음성의 일대일 비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한 혐의자와 동일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수백, 수천 건의 데이터를 하나씩 비교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행안부가 개발한 모델은 한 번에 여러 음성을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 하나의 목소



(왼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건이 서로 얹혀 하나의 거대한 그룹망을 형성한 모습. 원은 조직원을, 사각형은 범죄자의 음성 파일을 의미한다. **재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오른쪽) 박남인 연구사가 범죄를 연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룹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리와 여러 음성을 대조하는 ‘일대다’ 비교는 물론 여러 명의 목소리를 더 많은 음성과 대조하는 ‘다대다’ 비교까지 할 수 있다. 가령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100개의 음성파일을 확보했다면 이를 1만 3000개의 데이터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역시 단 몇 분이면 가능하다. 박 연구사는 “하나의 음성을 분석하는 데만 하루 이틀이 걸렸던 걸 생각하면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고 했다.

행안부의 음성분석 모델은 범죄 가담자들을 ‘그룹화’하는 기능도 갖췄다. 범죄자 한 명의 목소리가 정확히 판별되면 그가 연루된 또 다른 범죄를 연쇄적으로 추적하는 게 가능하다. 박 연구사가 대형 스크린에 띄운 자료에는 조직원을 의미하는 원 수천 개가 서로 얹혀 하나의 거대한 그룹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일범일 경우 원은 같은 색깔로 표시되는데 한눈에 봐도 동일한 색의 원이 많았다. 범죄자 한 명 한 명이 여러 사건에 걸쳐 있고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박 연구사는 “그룹화 기능을 탑재한 음성분석 모델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은 11월 8

일 열린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1만 3000개 데이터 중 약 6000개가 두 번 이상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의 목소리예요. 한 사람이 34번까지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경우도 있고 한 명이 총 18개 조직에 가담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게다가 조직원들은 새로운 범죄를 시도할 때마다 검사와 수사관 등 역할을 바꿔 활동해요. 그래서 한 명을 검거했다고 해도 여죄를 밝히거나 수사를 확대하는 게 어려웠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룹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음성분석을 통해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전국 경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피해자 수는 1만 2816명, 피해 금액은 1451억 원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2019년 코로나19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오픈뱅킹이나 간편송금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악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생활 곳곳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10월부터는 경찰에서도 행안부의 보이스 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 경찰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됐다.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간 경찰은 음성 감정이 필요할 경우 국과수에 의뢰해 결과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이 2~3주가량 소요돼 영장신청 등 발 빠른 수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음성 비교를 할 수 있게 돼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51명의 조직원을 검거한 사건 역시 경찰이 직접 음성분석을 한 뒤 수사를 확대해나간 결과다. 국과수는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모델 사용법과 분석 방법에 대해 연 2회 이상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음성 제보가 결정적 단서… “의심 전화는 녹음부터”
한편 음성분석 모델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적용할 수도 있다. “대리시험, 협박, 사기 등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음성을 통해 추적 가능한 사건이라면 뭐든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박 연구사의 설명이다. 국과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음성 분석 모델을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해당 모델이 영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개발 단계에 서부터 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기술 적용의 한계도 있다. 두 명이

상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 음성을 분석하기 까다롭다. 사람의 목소리가 노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도 관건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딥보이스’ 기능을 보이스피싱에 악용한 사례까지 생겼다. 행안부 모델에는 합성음(기계음)을 구분하는 기능만 있다.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음성분석 모델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축적’이다. 일단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비교·분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나온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걸려올 땐 일단 녹음하는 게 중요하다. 범인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박 연구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과수가 보유한 1만 3000개의 음성 데이터는 모두 국민이 제공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범죄자의 음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112)이나 금감원을 통해 제보하면 돼요. 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상습범의 목소리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공유해 연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전화가 많이 오니 조심하라는 거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걸려올 땐 반드시 녹음하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이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로

신고 일원화 사건 접수서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정부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국번 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으로 일원화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조치다. 과거에는 정부 부처가 신고·대응창구를 개별적으로 운영한 탓에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112에 신고하면 사건 접수뿐 아니라 악성 애플리케이션 차단, 피해구제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는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을 통해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법, 피해 신고 및 대처법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휴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0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 ①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②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전부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전부 산입)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휴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휴 8시간) × 365일 ÷ 12월 = 약 209시간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 최우선 협력과제로”

윤 대통령 APEC 첫 참석 기조연설

‘연대’는 윤석열정부의 핵심가치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APEC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늘날 세계 경제는 또 한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상기시켰다. “연결의 힘은 약화되고 곳곳에서 분절의 힘이 세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심화하는 기술 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를 들었다. 여기에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리스크는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발전해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연대다. 윤 대통령은 “APEC 경제인과 함께 추진할 세 가지 ‘연결성’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 가지 연결성 과제란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

대 간 연결성의 강화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APEC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은 아·태 자유 무역지대라는 경제통합 비전 아래에서 역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왔다”며 “그 결과 APEC 회원국은 이제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APEC 회원국의 1인당 소득도 발족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리스크는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 기업 차원에서는 생존의 문제”라며 “역내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APEC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APEC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연결성 강화

윤 대통령은 디지털 연결성도 강조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는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이라며 “국가를 넘나들며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돼야 하고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겠다.”

국가 간 디지털 격차도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질서를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인류는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과 자유계약 질서를 만들었다”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바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뉴욕 구상’에서 시작했다. 당시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선도하는 데 역점을 뒀다. 2023년 9월 21일 1년 만에 다시 찾은 뉴욕 디지털 포럼에서도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여러분이 모두 함께해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의제를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 제안

세 번째 연결성 과제는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

굴과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가치 창출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아·태 경제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연결성을 유지하려면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내 인구의 3분의 1이 24세 이하 젊은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PEC 국가들이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성장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1997년 역내 무역, 투자와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APEC 경제인여행카드(ABTC) 제도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과학 분야에서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APEC 회원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APEC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연결성을 앞장서 강조하는 것은 취임 이후 지속된 ‘책임외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인류 보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다자 외교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책임외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순방

윤 대통령, 팀 쿡 애플 CEO 접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5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CEO와 만남을 가졌다. 사진 뉴스

쿡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 한국 덕분에 현재의 애플 있게 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세계 경제의 연결성 강화를 강조했다. CEO 서밋은 APEC 부대행사 중 하나로 윤 대통령 외에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앨프리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몬 켈컴 사장,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역내 경제계 리더와 석학 1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다. 윤 대통령은 CEO 서밋에 참석한 이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윤 대통령과 쿡 CEO의 만남은 처음이다. 쿡 CEO는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쿡 CEO는 윤 대통령에게 “영광이다”라며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한번 뵙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열린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쿡 CEO와 함께 세계 디지털 기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눴다.

접견에서 쿡 CEO는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협력업체와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플은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쿡 CEO는 “애플은 한국 기업과 최근 5년간 1000억 달러 이상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달라”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애플은 전 세계 매출 1위의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스마트기기 제조에 있어 국내 부품 기업이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쿡 CEO 접견은 애플과 한국 부품 업체 간 공급망 협력을 견고히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의 의미를 “올해 숨 가쁘게 전개된 글로벌 책임외교의 방점을 찍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만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참석 등을 통해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순방 전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APEC이 상호 연계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기여와 연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내 상호연계성과 공급망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정립을 중심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X]

김효정 기자

“한인 미래세대 연구자 국적 관계없이 뒷받침하겠다”

윤 대통령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참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해 “한인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에 관계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미국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기업가, 연구자 100여 명과 만났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미래세대와의 만남을 가져왔다.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만난 것을 비롯해 미국 하버드대 연설과 ‘한·프랑스 미래혁신세대와의 대화’,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한·아세안 청년 AI(인공지능) 유스 페스

타’ 등을 통해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

이날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혁신과 도전을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정책을 지금 바뀌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지금 없애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늘려갈 것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스타트업 중 37.6%가 북미로 진출하고 그중의 절반 정도가 실리콘밸리로 진출하고 있다”는 자료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센터를 운영 중인 13개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포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인, 미국 우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들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을 격

APEC 순방 첫 일정은 동포 간담회

“한미동맹 역사는 미주 한인동포 발전의 역사”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5일(현지시간)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의 첫 일정을 동포 오찬 간담회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미주 한인동포 발전의 역사”라며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의 기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의 활

약은 첨단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보기술(IT)과 첨단 분야에서 많은 동포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번 순방이 올해 들어 네 번째 방미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인 금년은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월 국민 방문을 계기로 북한 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고 한국과 미국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첨단과학기술, 문화, 정보 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출범시켜 3국이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고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격차 해소와 인류 상생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과 혁신, 그리고 포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한인 연구자와 기업인들은 미국 사회에서의 성공담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윤요섭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돼 정부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시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과학기술인에게 실패는 빈번한 일로 이를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글 개발자로 일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정영훈 XL8 대표는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언어장벽을 넘는 방법을 고민하다 인공지능 번역 기업을 창업한 경험을 소개하며 “개인의 어려움이나 작은 문제인식이 혁신이나 창업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대의 제언도 이어졌다. 스탠포드대 대학

원 한인학생 대표인 오진원 씨는 “해외에서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게 학위 기간 연구과제를 통해 한국 대학이나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하거나 인턴십을 진행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학위 취득 후 한국에 돌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국내 기업 4D 리플레이에 다니는 박시연 씨는 “글로벌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이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줬다”며 “글로벌 성장을 꿈꾸는 모든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미 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 디지털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근본적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4일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를 주재하며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됐던 재

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또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한 전력에 대해선 요금을 동결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김장철 수급 정책 등 최근 추진한 민생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

수능 응원 메시지

“준비한 역량 최대한 발휘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5일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며 “목표를 향해 정진해온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과 함께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

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제형사 정의 실현 협력 지속”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피오토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을 접견하고 한·ICC 협

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치 사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ICC와 국제형사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대한민국은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 년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

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 이끌어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 매우 기쁜 일”이라며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새마을지도자·청년새마을세대가 새마을운동의 비전·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청년세대들은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위기에 맞선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년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새마을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돼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농업 혁신하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0일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하사에서 “우리 농업이 정보기술(IT)·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계공학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민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현장 농업인 및 청년·여성 농업인, 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8개 도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총 3600여 명의 농업인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정부 출범 당시 16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인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했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 규모였던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에 가보니 사막에서 스마트팜·수직농법을 활용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했다”며 “농민들도 스

마트팜과 수직농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 순방에 함께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나 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순방 때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주거를 비롯한 인프라 지원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며 “우리 모두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K] 강정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오토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그냥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복귀 지원에 1조 투입

직장 적응 돕는 ‘온보딩’ 신설...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2024년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 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1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쉬었음’ 청년 인구는 월평균 41만 4000명이다.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쉬었음’ 청년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쉬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청년층 고용 및 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 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구직·재직·재학 등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2024년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는 사업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니트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니트 청년 6000명을 대상으로 인턴, 기업 탐방 등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학 단계에서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2023년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린다. 아울러 일경험 기회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구직상담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 1000명)의 청년인턴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에게는 소통 및 협업 교육, 기업에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는 지원 인원 1인당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청년을 위한 특별 지원도 있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마음회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정례협의회를 신설해 ‘쉬었음’과 니트 청년 발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기존에는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서명만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아울러 전입자의 신분확인을 강화한다. 이전까지는 전입 신고자만

신분증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와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2024년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발급되는데 이때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일어났다. 이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관련 내용을 손질한다.

‘강원2024 대회’ 입장권 지금 예약하세요!

모든 경기·폐회식 무료 입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입장권 예약이 11월 11일부터 시작했다. 입장권을 예약하면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치러지는 15개 종목의 모든 경기와 폐회식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개회식 입장권은 유료로 A등급 10만 원, B등급 8만 원, C등급 3만 원이다. 예약 사이트(tickets.gangwon2024.org)에 회원가입을 하면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다. 1인당 6매, 단체는 인솔자 1인당 50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청소년(15~18세)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도전정신을 높이기 위해 창설됐다. 청소년 대회인 만큼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월 14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캐릭터 ‘몽초’의 안내에 따라 대회 입장권을 예약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다.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개최된다.

빈대 취약시설 11만 곳 집중 점검

17개 시·도별
빈대 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숙박시설과 기숙사 등 전국의 빈대 취약시설 11만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수점검을 하고 빈대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정부는 11월 14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대응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17개 시·도별 빈대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 지자

체에는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 방제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내성이 덜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8개 제품 사용에 대해 11월 10일 긴급 승인했다. 효과적인 살충제를 적기에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8개 제품 가운데 원료를 확보한 4개 제품은 즉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보다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가정용 살충제도 후속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수하물을 대상으로 열풍기를 활용한 구제 서비스도 추진한다. 빈대는 소지품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다만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 2024년부터 구제 서비스를 13개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빈대 발생 신고는 전주보다 123건 증가한 15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빈대가 발생한 것은 56건이다. 지하철이나 KTX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빈대 선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주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유족 인정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2023년 11월 기준 1만 4700여 명이다. 당시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에서 희생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특례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설정했다. 신고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보훈증으로 전국 농·축협서 금융거래 가능

2023년 6월 도입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11월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보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훈관서를 방문해 집적회로(IC)가 탑재된 보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발급받은 보훈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보훈증이 발급된다. 농·



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모바일 보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보훈증을 사용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카드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자격시험 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연장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텡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 개별 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현재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

서 수험생은 2년마다 시험을 치러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한 번 시험을 치른 뒤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개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

원서접수 기간 3일에서 5일로

인사혁신처가 2024년도 5·7·9급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11월 8일 공개했다.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실시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시험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도 고려했다.

2024년부터 원서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선발 인원,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2024년 1월 중 인사처 누리집(www.mppm.go.kr)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K] 조윤 기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개정 세법

대학입학전형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중소기업 근로자도, 월세를 내는 세입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말정산 때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수능 응시료도 월세도 학자금 상환금도 소득공제 가능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 대출 상환금 15%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 원 ➡ 6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을 90% (200만 원 한도)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을 70% (2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를 40% ➡ 80%
-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연말이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잘만 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보너스예요. 특히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알아두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시죠?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 대학 학자금 상환금도 교육비에 해당해요. 공제율은 15%예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의 학자금을 상환했다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을 갚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세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액에 대해서도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아울러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됐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15~34세)이라면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데 특히 올해부터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도 2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평소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올해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늘었어요. 기존 40%보다 두 배로 상향된 거예요. 게다가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대상이에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기부를 했다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도 반드시 챙기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취약계층과 문화·예술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때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5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알려주니 절세전략도 세우고 ‘13월의 월급’도 푹푹하게 챙기세요! 

조윤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APEC 회원국들에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박진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은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보건 위기·공급망 충격·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회원국 각료들과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안정적인 물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아·태지역 전체의 위기대응 능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APEC 내 공급망 교란위기에 대응하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의 3단계 주도국으로서 한국은 역내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첫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통신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국·캐나다, 북한인권 개선 위해 협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은 11월 13일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유엔군사령부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수호에 큰 기여를 해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탈북민 강제복송 등 문제 해결에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다자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재환 통신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e-라벨 서비스는 안전정보 효율적 사용 위한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
안전처
장



오유경 처장은 11월 13일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진행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에스티 천안공장을 방문했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판독(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지켜보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오 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다.

송진희 통신원

대학개혁 선도할 ‘글로벌대학’ 10곳 첫 선정 ‘5년간 1000억’ 지원

대학개혁을 이끌 ‘2023년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강원대, 포항공대 등 10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글로벌대학 30’ 사업 본지정 선정 평가 결과를 11월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육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 ▲한림대다.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4곳 포함돼 대학 수로는 총 14개교에 달한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5년 동안 학교당 총 1000억 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방자치단체 투자 유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이 7곳, 사립이 3곳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북이 각각 2곳, 부산·울산·충북·전북·전남·경남이 1곳씩이다.

2023년 처음 시작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

각해진 가운데 과감한 혁신으로 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만한 역량이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파격 지원’을 해 대학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2026년까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30곳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벌대학 지정 평가에는

“글로벌대학은 소수의 대학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지역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다.”

대학 108곳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혁신기획서는 대부분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교육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교육부와 위원회는 지난 6월 총 15곳(대학 수 19개교)을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 관리’, ‘지자체 지원·투자’ 등 3개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됐다.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배제됐으며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은 모

‘2023년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본지정 10곳

- 1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통합)
- 2 경상국립대학교
- 3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
- 4 순천대학교
- 5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통합)
- 6 울산대학교
- 7 전북대학교
- 8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통합)
- 9 포항공과대학교
- 10 한림대학교

글로벌대학30 사업

- 올해 비수도권 대학 10개교 내외 선정
- 2026년까지 30개교 선정 목표
- 5년 동안 총 1000억 원 지원

설립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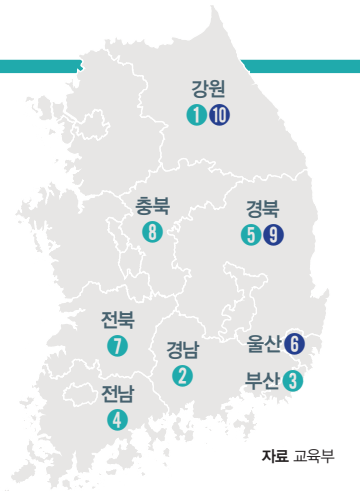
국공립 7곳

사립 3곳

예비지정됐으나 탈락(5곳)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사·도별



두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벽’,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무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역시 주목받았다.

성과 미흡 땀 지원 중지

예비지정 대학 15곳 가운데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등 5곳은 탈락했다. 위원회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들의 혁신성과 우수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미지정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올해 글로벌 본지정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높이 평가하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미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2024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1월 말 확정·안내할 예정이다.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3·5년 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하거나 지원 중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교육부는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

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이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2차 연도인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2024년 1월 ‘2024년 글로벌대학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는 글로벌대학을 선두로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승 글로벌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대학은 소수의 대학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지역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오늘 지정된 글로벌대학은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

강정미 기자

주 52시간제 유지 필요 업종·직종은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고용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주 52시간제

→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

48.2%

→ “업종·직종별 수요 반영이 어렵다”

54.9%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직종을 선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짜야근’을 근절하는 등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8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 근로자, 사업주, 일반국민 등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 통해 구체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

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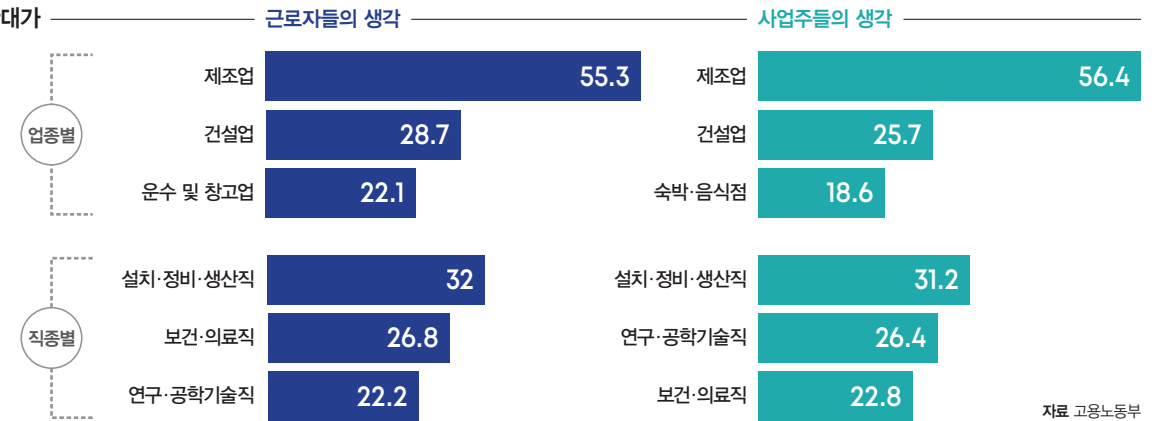
주 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 상황을 반영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근로자(46.4%), 사업주(38.2%), 일반국민(46.4%)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근로자 29.8%, 사업주 26.3%, 국민 29.8%)보다 10%포인트 이상씩 높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근로자는 제조업(55.3%)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28.7%), 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가?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수와 창고업(22.1%)이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 순으로 답했다. 사업주는 설치·정비·생산직(31.2%), 연구·공학기술직(26.4%), 보건·의료직(22.8%) 순으로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의 75.3%, 사업주의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

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계속 운영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올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사업장 가운데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64곳(73.6%),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곳

(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 실태조사에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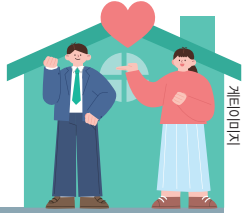
정광성 기자

사회에 대한 신뢰도 및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단위: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55.7 2.4%p 상승 58.1

2021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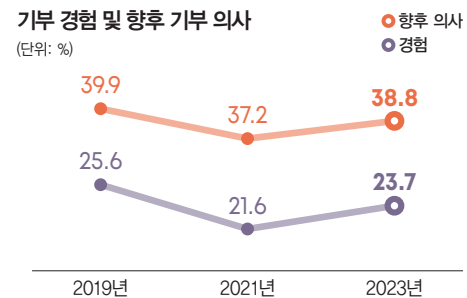


게이미지

13~19세	58.4
20~29세	53.2
30~39세	54.6
40~49세	56.7
50~59세	59.5
60세 이상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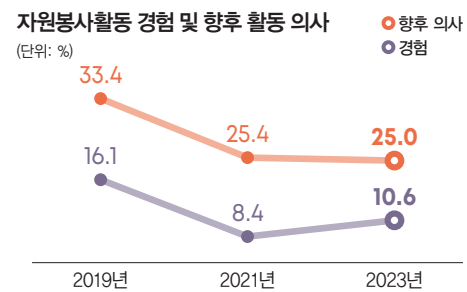
기부 경험 및 향후 기부 의사

(단위: %)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향후 활동 의사

(단위: %)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 항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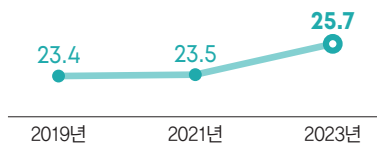


(단위: %)

65.7	1위
43.5	3위
44.6	2위
36.1	4위
17.3	6위
19.1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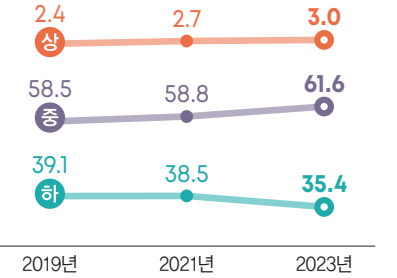
※ 19세 이상 가구주, 복수응답

내년 가구 재정상태 좋아질 것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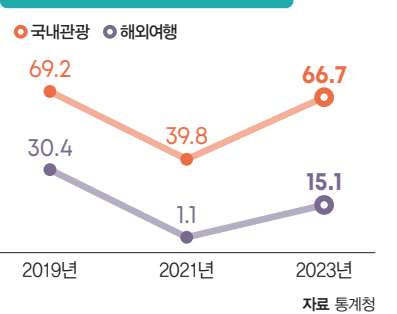


2023년	1위	66.1
2023년	2위	41.7
2023년	3위	40.2
2023년	4위	36.1
2023년	5위	25.2
2023년	6위	18.5

사회·경제적 계층의식 (단위: %)



여행 경험 (단위: %)



자료 통계청

국민 58% ‘우리 사회 신뢰’ 2년 전보다 2.4%p 증가 내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 61.6%

올해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021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 또는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년 전보다 늘었다.

통계청은 11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조사한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8.1%로 2021년보다 2.4%

포인트(P) 늘었다. 반면 ‘믿을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같은 기간 44.4%에서 41.9%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58.6%)이 남성(57.5%)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2.1%로 가장 높고 20대(53.2%)와 30대(54.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함께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도 2년 전보다 증가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사

람은 74.0%에 달했다. 특히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와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0.9%(51.0%), 0.2%(79.8%) 증가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질문에는 ‘중’이라는 대답이 61.6%, ‘상’이라는 대답은 3.0%로 2년 전보다 각각 2.8%p, 0.3%p 증가했다. 반면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4%로 3.1%p 감소했다.

19세 이상 가구주 중 한 달 평균 최

소 생활비와 비교해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7%로 2년 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대가 17.1%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10.7%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가구의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5.7%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조사 때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기부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3.7%로 2년 전보다 2.1%p 늘었다. ‘향후 기부 의사가 있다’는 사람도 38.8%로 같은 기간 1.6%p 증가했다. 기부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27.5%)가 가장 많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26.2%),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18.7%)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단체 활동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친목·사교, 취미활동, 종교단체 등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은 64.2%로 2021년 조사 때보다 28.4%p 증가했다. 단체활동으로는 친목·사교단체 참여가 77.1%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취미, 스포츠·여가활동(54.9%), 종교단체(25.0%) 등의 순이다.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34.%)도 2년 전보다 늘었다. 주중 여가생활 활용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85.9%), 휴식(73.3%),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34.4%) 순이었다.

선호 직장, 대기업 크게 늘고 국가기관 감소
청년·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 크게 늘고 국가기관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7.4%), 공기업(18.2%), 국가기

관(16.2%)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 선호도는 2021년(21.5%) 대비 5.8%p 증가했다. 반면 공기업(공사·공단)과 국가기관은 2년 전보다 각각 3.3%p, 4.8%p 감소했다.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13.5%에서 15.8%로 2.3%p 늘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9%), 안정성(22.1%), 적성·흥미(1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생활 여건을 묻는 질문에는 ‘좋아졌다’(39.1%)보다 ‘변화가 없다’가 48.7%로 더 많았고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도 12.2%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선 69.7%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9.1%로 가장 높았다. **☐**

정광성 기자

더 든든하게 국민 속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숨은 금융자산
17.9조 원
찾아줍니다

40대 A씨는 3년간 미국 지사에서 근무한 뒤 최근 입국했다. 해외로 이주하기 6개월 전 한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낮아 그대로 돈 채 출국했다. 해당 예금의 존재를 잊어 버리고 살던 A씨는 한국 본사로 복귀한 뒤 동료로부터 숨은 금융자산 환급사례를 들은 뒤에야 계좌를 떠올려 돈을 환급받았다.

60대 B씨는 15년 전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5년 전 만기됐으나 B씨는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방치했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는 주변 이웃의 얘기도 한몫했다. 그러다 최근 보험사 고객센터를 방문해 적용이율을 문의한 결과 만기보험금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돼 별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만기 보험금을 환급받아 적용이율이 높은 6개월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30대 C씨는 교통비 할인혜택이 큰 카드, 매일 커피 값 5000원을 할인받는 카드, 식료품 구매 제휴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늘어난 카드 사용금액만큼 카드포인트가 쌓이고 있지만 쓸 시간이 없어 그대로 뒀다. 이후 C씨는 버스에 붙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물을 통해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됐고 미사용 포인트를 모두 현금화했다.

이처럼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캠페인이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주간 열린다. 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과 공동으로 이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이 포함된다. 2023년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총 17조 9138억 원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이용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이 중 휴면 금융자산이 1조 6178억 원,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471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489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예·적금 7조 2830억 원, 보험금 6조 654억 원, 증권 1조 2758억 원, 신탁 100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일정 기간 해외 거주로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 만기가 됐는데도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어 찾지 않거나, 카드포인트 사용법을 몰라 방치하는 등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잔고 100만 원 이하 예금 즉시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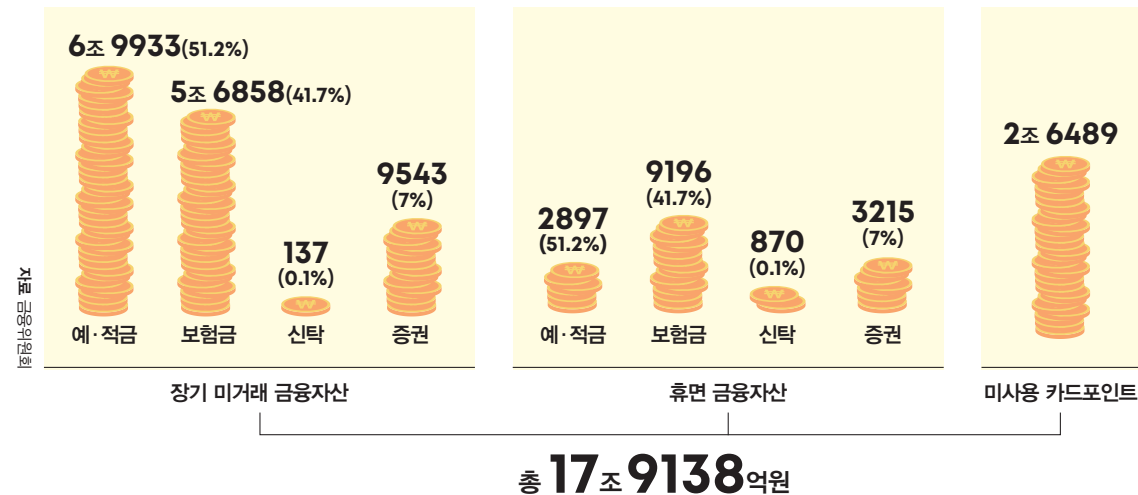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점 떨어지다가 소멸시효가 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익을 잃거나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캠페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익을 잃거나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캠페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숨은 금융자산을 알고 싶은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 정보 누리집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조회할 수 있다.

누리집이나 앱을 이용하는 경우 ‘내게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과 적금, 투자자 예탁금,

숨은
금융자산
현황
단위 억 원



신탁계좌는 즉시 현금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또한 현금화가 가능하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할 수 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실기주과실) 등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대신 금융소비자 정보 누리집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 접속하면 된다.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누리집이 한데 모여 있다. 예를 들어 미청구보험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누리집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누리집 ‘실기주과실(ksd.or.kr)’에서 각각 확인해야 한다.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지속 정비 계획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상호금융권은 2022년 캠페인을 별도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함께한다.

캠페인 기간에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된다.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영업점·자사 누리집·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한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방법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도 요구하지 않으며 인터넷주소(URL)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캠페인을 계기로 더 많은 소비자가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자산 만기 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만기 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만기 이후 적용되는 금리 수준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

더 든든하게

국민 속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거동불편 노인에게
의료 서비스!
의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이하 센터)’가 2024년 100곳까지 늘어난다. 11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2022년 12월 시작된 1차 시범사업에 따라 현재 전국에 28곳이 운영 중이다. 9월 기준 1993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복지부는 노인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원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센터 시범사업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매달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1차 시범사업 추진 결과 이용자의 80% 이상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증후군(시·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복용약 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 1~4등급에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의사는 매달 1회, 간호사는 2회씩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사회복지사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꾸준히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세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근하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서포터즈 2기 정하늘·오민기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일 부산에서 전 세계가 소통하길”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모두가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가운데 긴 레이스에 열정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엑스포 서포터즈’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다. 국내외 청년이 참여한 서포터즈는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결성됐는데 2023년 11월 현재 3기 서포터즈 120명이 활동 중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한다. 나아가 세계 각국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 서포터즈에는 외국인 참여자도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폭력 같은 보편적 문제도

논의하는 활동을 펼친다.

지난 4월 3일 서울의 한 호텔에 하늘색 옷을 맞춰 입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후보도시를 심사하기 위해 방한한 세계박람회기구(BIE) 심사단을 기다리는 대한상의 엑스포 서포터즈였다. 서포터즈 2기 멤버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정하늘 씨는 “우리가 보여주는 표정과 목소리가 심사단이 부산에 갖게 될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했다”고 말했다.

파트릭 슈페히트 BIE 심사단장을 필두로 심사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가 터졌다. 심사단은 예상지 못한 환대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포터즈는 심사단에게 다가가 심사단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서포터즈 멤버 오민기 씨는 “그림을 받은 심사단이 놀랍고 감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액자에 넣어야겠다고 말하는 심사단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포터즈 2기로 활동하고 ‘우수 활동팀’으로 뽑혔던 정하늘 씨와 오민기 씨를 만났다. BIE 심사단이 부산을 방문하고 엑스포 유치 열기가 고조되던 때에 서포터즈로 참가한 터라 기억에 남는 일이 많다. 이들은 활동이 끝나고도 서포터즈 단복을 입고 다니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28일 최종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이들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염원을 들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11월 28일, 182개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에 도전한 도시는 한국의 부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 이탈리아의 로마 등 3곳이다. 개최지는 11월 28일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대표단이 각국을 대표해 익명으로 표를 던진다. 한 도시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득표하면 곧바로 최종 개최국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3위 도시를 탈락시키고 두 도시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이 중 득표수가 많은 도시가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다. 결과는 당일 발표된다. 정부는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1차 투표에서 다른 도시를 지지한 나라의 표를 끌어와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엑스포 서포터즈’ 오민기(왼쪽) 씨와 정하늘 씨는 “전세계 소통의 장을 열어줄 엑스포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서포터즈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원래 엑스포 유치에 관심이 있었나?

(정하늘, 이하 ‘정’) 대학에서 국제통상을 전공했다. 그 덕에 국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2030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을지 관련 언론보도를 자주 찾아보곤 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도해볼 만한 외부활동을 찾다가 도전하게 됐다.

(오민기, 이하 ‘오’)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관심만 있었다.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였다. 처음에는 대한상의회가 주최한다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서포터즈 모집 공고를 들여다봤다. 그러다가 엑스포가 왜 부산에 유치돼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고 활동에 빠져들었다.

서포터즈로 어떤 활동을 했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

(정) 길거리에 나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를 하는 ‘버스킹’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 부스를 만들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퀴즈를 마련하고 사진 찍는 시간을 만들어 상품도 나눠주곤 했다. 처음에는 안면 없는 사람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대화하는 일이 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엑스포에 관심을 갖고 말을 건네고 행사에 참여해주는 시민들이 많아 서서히 몰입하게 됐다.

(오)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무슨 주제로 활동하느냐고 물어오고 엑스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는 ‘꼭 부산에 엑스포가 유치됐으면 좋겠다’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보기 좋다’는 소감도 건네줘서 힘이 났다.

실사단 환영 행사도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일 것 같다.

(정) 실사단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부산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실사단을 만나면 어떤 역할을 할지 미리 고민했는데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같이 사진 찍자’고 말하니 모두들 너무 좋아했다.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며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홍보 활동을 펼쳤나?

(오) 게릴라 홍보전을 펼친 적이 있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과 함께 서울 종로에 있는 통인시장과 서촌 일대를 돌아다녔다. 통인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엑스포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념품을 나눠줬다. 상인들에게는 엑스포 종이봉투를 주면서 많은 방문객에게 엑스포 유치활동을 홍보해줄 것을 부탁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에서 최 회장 곁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미디어에서나 접하던 경제계 리더와 대화를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정) 무엇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돼야 하는 이유를 주로 알렸다. 실제로 왜 유치돼야 하는지 물어오는 시민도 많았다.

왜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해야 하나?

(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행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산업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K-컬처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가 됐다. 그러니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공통의 주제를 갖고 소통하는 엑스포에서 방향을 잡고 이끌어어나가는 국가가 필요한데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왜 부산일까?

(정) 세 가지 측면에서 부산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부산이 위기를 극복한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이라는 위기를 극복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을 일깨워준 도시가 부산이다.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것은 한국의 발전 역사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부산은 국제적인 행사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미 부산

경제적 효과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엑스포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엑스포는 소통의 장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엑스포가 유치돼야 한다.

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나 아시아 최대 한류 콘서트인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행사가 열린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부산에서 전 세계인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오) 경제적 효과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엑스포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엑스포는 소통의 장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엑스포가 유치돼야 한다.

(정) 2030 부산엑스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제시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은 가능성의 도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세계 최대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이 속한 팀이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됐다고 들었다.

(정)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해준 적도 드물었던 것 같다. 활동하면서 ‘엑스포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어 시민 참여를 유도한 적이 있었다. 주사위를 던져서 엑스포가 개최됐던 도시들을 지나 부산으로 향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많이 참여할까 걱정도 했었는데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놀랐다.

개인적으로 엑스포 서포터즈로 활동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

(정) 대학생으로서 사회와 연관 있는 일을 하길란 쉽지 않다. 기회가 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서포터즈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돼 무척 뜻깊었다.

(오) 개인적으로는 진로를 세심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엔지니어를 지망하고 있는데 기술만 들여다보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소통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김효정 기자

숫자로 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2023년 9월 말 기준)

민·관 이동거리

지구 **409**바퀴 **바퀴** 정부: 850만 km
기업: 790만 km

민·관이 만난 사람

2308명 대통령: 91개국 455명
총리: 92개국 153명
13개 기업: 151개국 1700명

대통령·총리 방문 국가

25개국 대통령: 미국·영국·프랑스
일본·폴란드·인도·베트남 등
총리: 중국·태국·체코
아르헨티나·칠레 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요 계획

기간 2030년 5월 1일~10월 31일 (총 184일)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부제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

개최 부지 부산 북항 일대 총 343만㎡

교통 계획

항공(김해, 가덕), 항만, 철도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접근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트램·수상택시 등) 및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계획 수립

참가 규모

방문객 3480만 명 (국내 3160만 명, 외국인 320만 명)

공식 참가자: 160개 국가, 20개 국제기구, 15개 NGO, 40개 기업

개최 비용

약 6조 5000억 원

경제 효과

43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1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자료 국무총리실

등록박람회 vs 인정박람회

한국, 세계 3대 행사 유치한 7번째 국가 도전

세계박람회(엑스포)는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나뉜다. 등록박람회는 5년 주기로 열린다. 이 사이에 여러 인정박람회가 열린다. 등록박람회는 개최 기간이 최대 6개월인 데 반해 인정박람회는 4개월이다. 등록박람회의 주제는 포괄적이지만 인정박람회는 특정 분야를 다룬다. 규모도 차이가 난다. 등록박람회는 전시 규모에 제한이 없지만 인정박람회는 25만㎡ 이내로만 제한된다. 등록박람회는 참가국이 자국 경비로 전시관을 짓지만 인정박람회는 개최국이 지어서 제공한다.

1993년 열린 대전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모두 인정박람회였다.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면 한국은 세계 3대 행사를 모두 유치한 7번째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세계 3대 행사로 불리는 올림픽, 월드컵, 등록박람회를 모두 치른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 6개 국가뿐이다.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7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11월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70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대표들은 이날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 수호’와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다

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불법행위 중단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 참석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국방부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억제전략(TDS) 10년 만에 개정

이에 앞서 11월 13일에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함께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신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하고 개정된 ‘2023 TDS’에 서명했다. TDS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11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를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양국 장관은 “2023 TDS’가 고도화된 북한의 핵·WMD와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 완전한 비핵화’ 국제사회 역할 중요

11월 12일에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도 열렸다.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2024년부터는 3국 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3국 국방장관은 연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세워 2024년부터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지난 8월 3국 정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조치 진행 현황도 점검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맞지 않는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등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북·러 간 군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K]

정광성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영상콘텐츠 산업 2027년 40조 원 규모 육성 세계 4대 강국으로

정부가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 40조 원으로 키우고 ‘킬러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영상산업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력이다. 유 장관은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킬러콘텐츠 5년 동안 5편 목표

문체부는 2027년까지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 원, 수출 규모를 18억 달러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1년 산업 규모가 28조 원, 수출 규모가 9억 20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연평균 6.1%, 11.9%씩 확대돼야 한다.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른바 ‘킬러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5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영상산업 활력 제고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영상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6000억 원 규모,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킬러콘텐츠와

IP에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기존의 모태펀드(문화계정)와 달리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제작비를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 254억 원, ‘수리남’ 350억 원, ‘지리산’ 300억 원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기업 소속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인정해 세액공제 시 인적요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영화, OTT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등을 ‘영상물’로 통합 정의하는 법률체계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영화비디오법상 ‘영화’는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만 제공되던 기존 보증체제도 확대된다. 문체부는 기획·개발 단계의 콘텐츠 프로젝트도 보증 지원을 받도록 문화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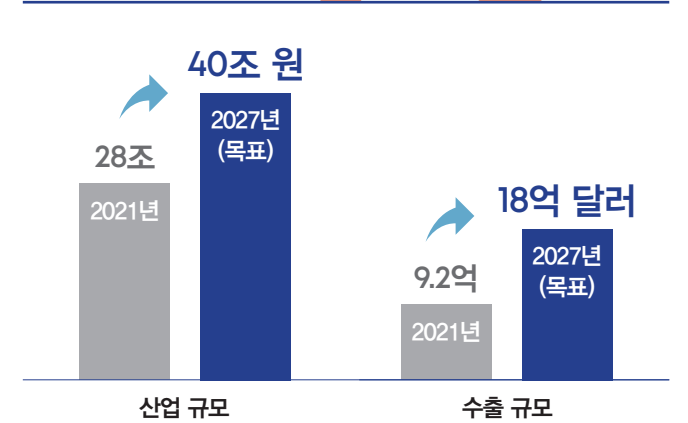
미개봉 작품을 개봉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자를 유도하는 ‘개봉촉진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영화 한 편이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다.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 세계화

IP를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아닌 OTT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문체부는 성공한 IP를 확장·활용하는 데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작사가 OTT로부터 100% 제작비를 지원받고 IP를 넘기는 대신 IP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시 IP를 이전받아 초과수익을 독점하고 국내 제작사는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중소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해 사업모델 공유, 사업 연결, 계약 상담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허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과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목표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

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 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그 비용으로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벽(Wall)과 특수시각효과(VFX)를 갖춘 버추얼스튜디오 등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비싼 해외 촬영 대신 버추얼스튜디오 배경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영상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문체부는 영상 창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제작사, 플랫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와 제작자 협회·단체 간 협상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추진한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K

이근하 기자

영상산업 도약 전략

2023. 11. 14 (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국내 최초 탄소중립형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내연기관차? NO!
불멍? NO!
불편함? YES!

탄소 끄고 별을 켜다



1 2023년 9월 21일 북한산국립공원에 국내 최초 탄소중립형 야영장인 사기막야영장이 문을 열었다. 2 사기막야영장 내에는 무공해 자동차만 출입 및 운행이 가능해 내연기관차를 타고 온 경우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3, 4 탄소제로 영지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나 자전거를 이용한 자가발전 에너지를 사용한다. 5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마련돼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사기막야영장은 탄소중립 선도 야영장으로서 전기·수소차량만 출입이 가능하오니 내연기관차량은 회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사기막야영장(이하 사기막야영장) 입구에 써 있는 안내문이다. 내연기관차라고 실망하긴 이르다. 차를 돌려 3.8km 떨어진 북한산성 제1주차장(서울 은평구 진관동 280)에서 셔틀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주차장에서 야영장까지 왕복하는 무료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운행된다. 친환경 전기차인 셔틀버스는 15인승으로 캠핑에 필요한 짐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차내 공간이 넉넉하다. 버스를 타고 야영장 안으로 들어가면 북한산에 아늑하게 안긴 야영지가 보인다. 내연기관차의 출입이 금지된 이곳은 국내 최초 탄소중립형 야영장이다. 수도권에 첫 국립공원 캠핑장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문을 연 사기막야영장은 3만 5000㎡ 규모로 조성됐다. 북한산국립공원에 캠핑장이 생겼다는 소식에 개장부터 예약 열기가 뜨거웠다. 야영장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매월 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

다. 특히 단풍이 찾아오는 10월과 11월은 캠핑장의 성수기다. 하지만 다른 야영장과 달리 이곳은 클릭만 빠르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동의해야 예약이 가능하다. 첫째, 무공해 자동차(전기차, 수소차)만 출입(운행)이 가능하다. 둘째, 내연기관차 이용 시 북한산성 제1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셋째, 숯불이나 화로장작, 불쏘시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넷째, 배달 오토바이도 출입이 제한된다. 다섯째,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영장 소등제를 운영한다. 이 모든 항목에 동의하고

탄소중립형 야영장을 예약하는 이용객들은 ‘탄소 줄이기’에 동참한 것이다.

캠핑도 하고 환경도 지키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캠핑 산업 규모는 7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국내 캠핑 인구가 2022년 700만 명을 넘었다고 추산했다.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캠핑 야영장 안팎의 오수와 쓰레기 방치, 이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위협받는 등 여러 문제가 대두했다. 국립공원은 한국의 대표적 탄소저장고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탄소

줄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사기막야영장 안에는 일반 야영지 27개 동과 체류시설 43개 동이 있다. 체류시설은 20㎡ 미만의 하우스형 솔막과 20~35㎡의 하우스형 카라반으로 나뉜다. 가장 넓은 하우스형 카라반은 4인 가족이 이용하기에 넉넉하다. 내부에는 온수를 이용한 난방시설과 화장실 등이 구비돼 있다. 단 침구는 제공하지 않으니 침낭 등을 챙겨와야 한다. 취사도 가능하다. 외부에 있는 테라스에 전기콘센트를 연결하면 된다. 숯불이나 화로장작 사용이 불가한 대신 전기그릴을 비롯해 고기를 구

친환경 캠핑 실천방법

- 1 다화용기를 사용한다. 일회용 수저·접시·컵 대신 다화용기를 사용한다.
- 2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식재료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조리한다.
- 3 쓰레기 ‘줄임(조강하면서 쓰레기 줄기)’을 실천한다. 캠핑을 마친 뒤에는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처리한다.
- 4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 내용물은 비우고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한다.
- 5 쓰레기는 되가져간다. 종량제봉투를 미리 챙기고 쓰레기를 담아서 집으로 되가져간다.



(위) 온수로 난방하는 하우스형 카라반은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넉넉하다. (아래) 사기막야영장에서는 다화용기 대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진 C영상미디어

위 먹을 수 있는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화용기 대여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인 세트는 5500원, 4인 세트는 9900원에 빌릴 수 있다.

사기막야영장 개장 전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화용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야영장을 방문한 이용객들은 “여행자 입장에서 쓰고 반납하면 끝이라 일회용품만큼 편리하다”, “짐을 싸오는 것보다 대여해 쓰니 짐이 줄어 좋다”고 말했다. 야영장 중앙에는 개수대와 공용 화장실이 있고 개수대 옆에는 음식


물 처리기가 설치돼 있다. 처리기에 음식 잔여물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가루로 분쇄돼 간편하다.

배불리 먹고 나면 산책에 나설 차례다. 야영장 주변을 빙 두른 오솔길은 가파르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걷기에도 딱 좋다. 야영지 한 켠에는 친환경 놀이터도 있다. 내부의 자재와 모래는 모두 환경에 무해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놀이터 뒤로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나무마다 이름표가 걸려 있다. 야영장 이름인 ‘사기막’의 유래도 소개돼 있다. 사기막은 그릇을 구워 만들던 가마와 관련된 지명이다. 옛 가마터는 주로 흙과 목재, 물이 풍부한 산기슭에 위치하는데 북한산 자락은 이런 조건에 적합했다. 유적도 구경하고 길에 떨어져 있는 밤송이와 솔방울, 낙엽 등을 줍다보면 어느새 해질 무렵이다.

밤이 되면 서울 근교에서도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시의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공해와 광해(光害) 때문이다. 밤새 쉬지 않는 가로등과 옥외간판, 조명은 빛공해를 일으켜 시야를 가린다. 사기막야영장은 밤 10시가 되면 모든 불을 소등한다. 오솔길을 밝

히던 작은 전구들도 꺼진다. 야영객은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삼삼오오 모여 북한산 머리맡을 수놓은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다.

여행 탄소의 95%는 이동과 숙박에서 발생
여행은 ‘의식주의 이동’이다. 먹고 자고 입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의 이동이다. 그만큼 탄소배출량도 많다. 해마다 전 세계 여행객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13억 7000톤. 우리나라 한 해 탄소배출량의 2배다. 이중 95%는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먹고 씻는 숙박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여행의 방식을 바꾸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캠핑장 내부에서만이라도 친환경 모드로 전환해보자. 사기막야영장 내부에는 자전거 페달을 밟아 자가발전한 에너지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탄소제로 영지도 4곳 운영 중이다.

사기막야영장에서 근무하는 국립공원공단 김도균 주임은 “탄소를 줄이는 캠핑을 즐기자는 움직임에 점점 더 많은 야영객이 동의하고 있다.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역시 캠핑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슬기 기자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연말까지 특별안전점검

친환경차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만 대로 전년 대비 68.4%, 수소차는 3만 대로 52.7%, 하이브리드 차량은 117만대로 28.9% 증가했다.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나 안전성에 대한 염려로 우려의 시선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1일부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별안전점검이란 국산·수입산 전기차 50여 개 차종에 대해 이상이 있으면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종합무상안전점검 서비스다.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차종의 점검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특별안전점검은 제조사와 협력해 실시되는 만큼 전기차 소유주는 제조사 안내에 따라 점검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제조사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숨은 국대 찾기

‘전세지옥’ 쓴 최지수 작가

전세사기 820일의 기록

“돈은 잃었지만
꿈은 잃지 않았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나는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2023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만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1만 3903건, 사고액은 3조 1244억 5742만 원이었다. 통계 속의 피해자는 숫자로 존재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그들은 저마다 다르게 실재한다.

‘전세지옥’을 쓴 1991년생 최지수 씨는 파일럿을 꿈꾸는 사회초년생이었다. 민항기 조종사가 되려면 1억 원가량의 훈련비용이 든다. 11학년이던 작가가 졸업하던 시기는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멈춰 있었다. 충남 천안시에



피해 당사자로 ‘전세지옥’을 쓴 최지수 씨는 자신의 책이 피해를 줄이는 ‘작은 일령임’이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극심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느낀다. 책의 첫 페이지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썼다. 전세제도의 맹점이 보완돼 더는 피해자도 희생자도 없길 바란다.”

있는 외국계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그는 훈련비용을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아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는 월세를 아끼려고 발품을 팔았고 전세보증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에 2020년 생애 첫 대출을 받아 580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그 후 그의 생각의 회로는 ‘그때 그 집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시간과 계획, 그사이 차곡차곡 모았던 종잣돈과 꿈이 분분히 흩어졌다. 2021년 7월 최 씨의 전셋집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고 2023년 4월 낙찰된 후 세입자들은 모두 퇴거명령을 받았다. 파일럿을 꿈꾸던 서른두 살 청년, 요리와 캠핑을 좋아하던 여행가, 헝가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와 결혼을 꿈꾸던 남자는 그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다세대주택을 전셋집으로 얻기까지 과정이 궁금하다.

당시 네 곳의 부동산에 가서 스무 군데 정도의 집을 봤다. 집을 구한 2020년 7월은 이른바 전세대란이었다. 전셋집은 적은데 구하려는 사람은 많았다. 전세로 나온 매물의 대부분이 대

출금이 많은 위험한 물건이었는데도 괜찮다 싶으면 바로 나갔다. 부모님과 공인중개사였던 큰아버지께 문의를 드려 그중에서 신중하게 골랐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대부분의 입주자가 월세로 살고 있어서 만약 문제가 생겨도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1억 원의 공제증서도 건네줬다.

그런데도 전세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내가 받은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며 알게 된 사실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니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만약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17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보증금 5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했다. 나는 800만 원 차이로 받지 못했다. 여전히 궁금하다. 공인중개사는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나에게 29만 원의 복비를 받으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집주인을 만나본 적은 있나?

계약서에 써 있던 집주인의 전화번호는 사실 건물 관리사무소장의 번호였다. 집주인을 만난 적도, 통화가 된 적도 없다. 그저 그가 대출이 많다는 것과 나의 보증금이 그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것밖에 모른다.

당시 전세보증금도 일부 대출을 받아 마련했는데.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합격한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2021년 헝가리로 취업했는데 2022년 7월 전세대출금 2년이 만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헝가리의 월세와 물가가 올라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헝가리 기업을 퇴사하고 돌아와 카드로 3300만 원을 대출받아 전세대출을 갚았다.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300만 원씩 12번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 카드빚을 갚기 위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밥집에서 일하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횃집에서 일했다. 그렇게 12시간을 일하고 돌아갈 곳이 사기당한 집이라는 게 괴로웠다.

여자 친구에게는 이런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나의 불행 때문에 타인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연애나 결혼은 지금의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것도 부담이 되고 지인들과 자전거를 타고 근교에 놀러가는 일상도 사치처럼 느껴진다.

‘전세지옥’을 쓰는 과정은 어땠나?

지난 2년 3개월을 다시 돌아본다는 게 고통스러웠다. 지옥문이 열리던 그때의 공기와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당시 기록을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카카오 브런치스토리에 글을 연재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그 글을 읽었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그 돈 갚아줄 테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부모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연락을 피했는데 계속 돈을 보내주셨다. 나는 당시 이자율 10%의 카드빚을 갚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6%의 이자율로 집담보대출을 받으셨다. 천안을 떠나 부모님이 계신 경기 용인 본가에 들어갔고 덕분에 저녁에 하던 횃집 일은 그만둘 수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합동브리핑에 ‘전세지옥’을 들고 나왔다.

처음엔 우물 안에 갇힌 기분이었는데 그 우물 안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저기서 손을 내밀어주는 느낌이다. 피해확인 절차를 줄이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반가웠다. 나도 전세피해확인서를 받기까지 절차가 까다로웠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나처럼 전 재산과 집을 잃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저리의 대출을 해주면 좋겠다. 집을 잃은 신흥부부나 경제능력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주택청약 시 우선권을 주면 어떨까?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극심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느낀다. 책의 첫 페이지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썼다. 전세제도의 맹점이 보완돼 더는 피해자도 희생자도 없길 바란다.

최지수 씨를 만난 건 11월 7일이었

었다. 책이 나온 뒤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성실함이 몸에 밴 청년. 한 달이 지나면 그는 여기에 없다. 12월부터 1년 동안 최 씨는 원양어선에 오른다. 만 34세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파일럿 훈련을 받기 위해 돈을 모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는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훈련을 받았다. 입대를 앞둔 것처럼 하루를 쏘

개 쓰는 요즘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피해자’로만 남지 않기 위해 그는 작가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바다에서 돈을 벌어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이를 계획이다.

“꿈을 이를 돈은 잃었지만 꿈을 잃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꿈의 향로에서 멀어져 있지만 향로를 수정해서 다시 제 궤도로 돌아올 겁니다.”

유슬기 기자

전세사기 범죄 근절 대책

윤 대통령 “전세사기, 지구 끝까지 추적하라” 주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1일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중 ‘전세지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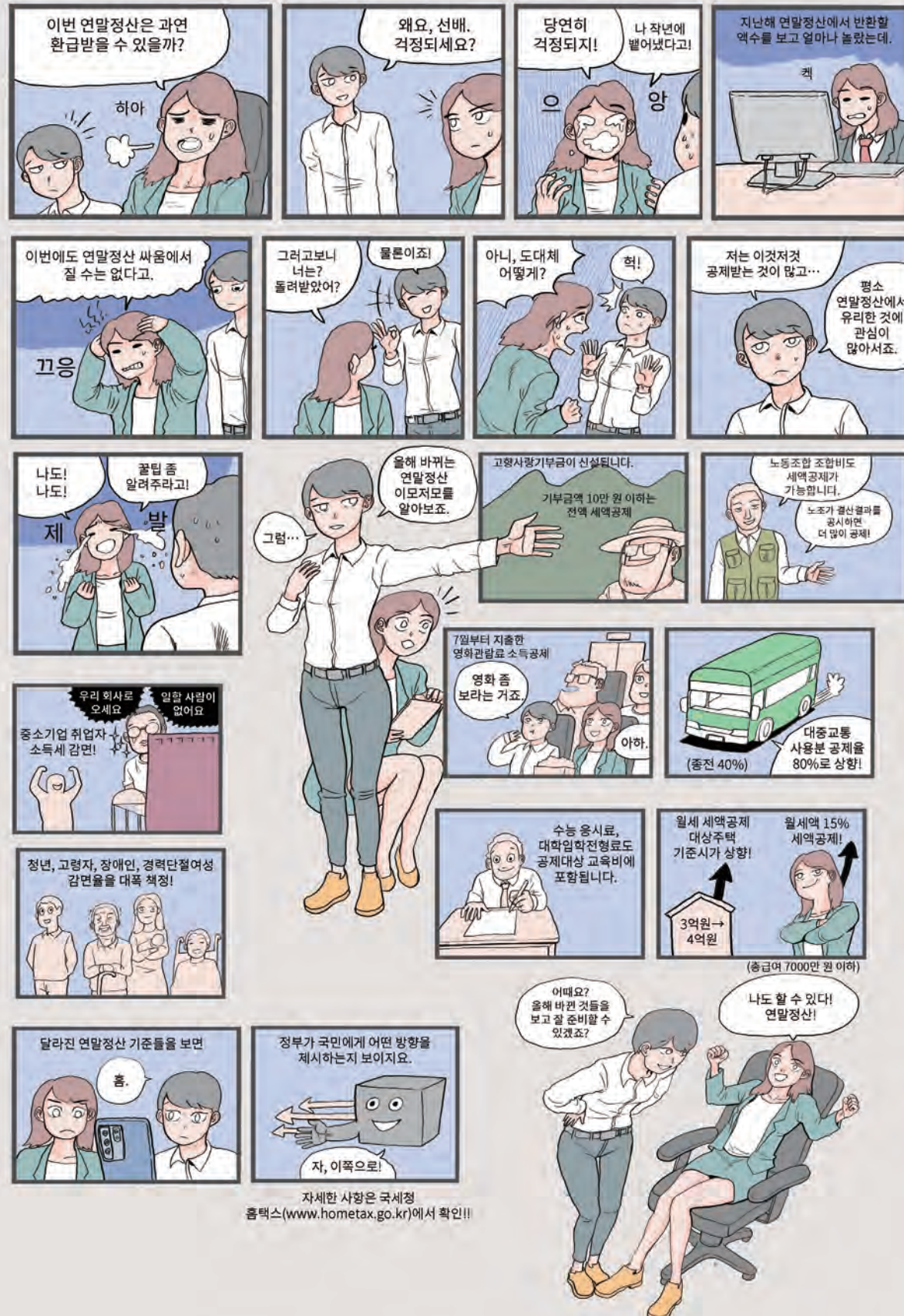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엄벌 의지를 표명하며 “지구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 등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재산 추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경찰청 역시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밝혀진 혐의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범죄척보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최지수 씨의 책 ‘전세지옥’을 들고 브리핑장에 들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책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며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꿀팁



건강검진만 받으면 아무 소용없다

연말이 가까워오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늘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주는 나라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건강검진 항목에는 당뇨, 고혈압, 간기능 검사가 포함돼 있다. 10년마다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54세와 66세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에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암검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고 고위험군은 간암과 폐암까지 검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건강검진은 아파서 받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직장이나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받기 싫어도 받아야한다.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 결과 '간수치 상승, 당뇨, 폐 결절 등의 다양한 이상이 있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아 들고서도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당장 아프지 않으니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이다. 상당수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환이 의심된다고 전해 듣지만 그뿐이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은 몸에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질병이 아니다. 대신 사망원인에서 가장 많이 꼽히는 질병 중 하나인 뇌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다. 유일한 예고가 있다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다.

암검진에서도 마찬가지다. 암은 크기가 상당히 커지거나 특정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초기에는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암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날 정도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 암검진 또한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해 미리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기 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5%이고 유방암의 경우도 1기는 98.2%, 2기는 91.7%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암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받고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다. 50대 이상에서 실시하는 대장암검진인 대변잠혈검사의 경우 피가 검출되면 대장내시경을 받도록 안내하지만 실제로 대장내시경을 받는 사람은 10명 중 4명에 그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좀 다르다. 자동차 검사를 받고 나서 엔진이나 바퀴,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탈게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기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이상이 생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검진의 경우 검사는 의무지만 상담이나 치료는 의무가 아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검사만 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검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예방까지 해야 검사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 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으면 꼭 의사와 상담하자. **K**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빛나는 외모만큼 눈부신 마음을 가진 의사.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서 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작가이기도 하다. <히틀러의 주치의>를 비롯해 7권의 책을 썼다. 의사가 아니라 작가로 돈을 벌어서 환자 한 명당 진료료 30분씩 보는 게 꿈이다.



1 보행 약자도 불편 없이 오갈 수 있는 나무 데크길로 조성됐다. 2 횡통길 양쪽 끝 지점에 세족시설이 마련돼 있다. 3 자락길 중간중간 몸을 쉬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이런 곳이 명품숲길!

서울 안산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 함께 걸어볼까요?
산림청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선정

산림청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했다. 대부분 하루 만에 산행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이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점도 특징이다. 그동안 가꿔온 산림을 통해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선정 이유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아 명품숲길 30선을 뽑고 7월에는 국민 신청을 받아 20선을 추가했다.

명품숲길 50선은 경사가 완만하고 편의시설이 잘 정비된 코스, 유명 전망대를 만날 수 있는 코스 등 등산 초보도 오를 수 있는 곳들로 구성됐는데 특히 '무장애 숲길'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도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안산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 인천 남동구의 '만수산 무장애 숲길', 부산 북구의 '구포 무장애 숲길' 등이 해당된다.

이 중에서 안산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이하 안산 자락길)을 찾았다. 안산 자락길은 연간 방문객이 8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볼 만한 도보여행 코스 베스트10'에도 꼽혔을 만큼 도심 속 힐링 숲길로 사랑받고 있다. 봄이면 수천 그루의 벚꽃나

무, 여름이면 초록빛 가득한 메타세콰이아 숲, 가을이면 붉고 노란 단풍이 맞이하는 곳,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무악재역·홍제역 등 어느 방향에서 출발해도 닿을 수 있는 자연이다.

메타세콰이아의 비경 속으로

독립문역 5번 출구를 나와 약 300m를 직진하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보인다. 동시에 안산 자락길 이정표가 눈에 들어온다. 이정표가 안산 자락길 곳곳에 세워져 '길눈이 어두운' 사람도 방향을 잃을 염려는 없다. 임시정부기념관을 중심으로 진입로가 갈린다. 안산 자락길 능안정 쪽으로 가고 싶다면 기념관을 지나쳐 한성과학고등학교 방향으로, 북카페 쉼터 쪽을 원한다면 기념관을 통과하는 계단을 오르면 된다. 방향의 차이일 뿐 어디를 선택하든 7km 이어지는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안산 자락길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이기 때문이다.

계단 끝에 다다르면 울퉁불퉁한 경사길이 등장한다. 걷다가 '이 길이 맞나' 싶을 즈음 나무 데크길이 펼쳐지며 무장애 자락길의 시작을 알린다. 안산 자락길은 경사율 9% 이내로 조성됐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에 선정된 안산 자락길의 메타세콰이아 구간은 도심이라곤 믿기지 않는 울창함을 자랑한다.
사진 C영상미디어



한 시민이 등산 장비 없이 편안하게 자락길을 걷고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널찍한 서울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사진 ©영상미디어

“안산은 ‘아낌없이 주는 산’으로도 통한다. 옛 이름이 모악산(母岳山)으로 ‘어머니의 산’이라는 뜻이다. 이름처럼 모든 보행약자를 보듬고 높지 않은 곳에서 멋진 전망을 내어준다는 이유에서다.”



족도 불편 없이 오갈 수 있다. 대신 자전거通行, 등산스틱 사용, 아이젠 착용은 금지다.

일부 구간은 이준, 남자현,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에 대한 안내판으로 꾸며졌다. 이들의 생애, 핵심 공적이 적힌 안내판을 읽다 보면 숲속 분위기가 또 다르게 느껴진다. 가파른 산책로였다면 숨을 돌리느라 주변을 둘러볼 마음이 덜했을지 모른다. 평탄한 길이 주는 여유로움의 매력이다.

안산은 높이 296m의 낮은 산이다. 때문에 전망대에서 엄청난 높이감을 느낄 순 없지만 인왕산과 북한산 자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산을 배경으로 고층 아파트와 주택가가 어우러진 풍경도 흥미롭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운 곳 중 한 곳이다.

눈과 코가 즐거운 것과 더불어 맨발로도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폭 2m에 이르는 황톳길이 450m가량 이어진다. 황토가 묻은 채로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걱정은 내려놓아도 된다. 황톳길 양쪽 끝 지점에 세족시설과 쉼터가 마련돼 있다.

안산 자락길의 진가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 구간에서 드러난다. 서울 도심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울창함을 자랑한다. 군데군데 놓인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면 나무 사이로 파란 하늘이 쏟아질 것 같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은 덤이다.

보행약자 보듬고 멋진 전망 내어주는 산

저마다의 속도로 걷다 보면 어느새 안산 정상(봉수대)으로 오르는 길이 나온다. 이곳은 흙길, 바윗길, 계단이 섞였다.

봉수대에 올라가면 시야가 탁 트인다. 남쪽으로 한강이 보이고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서울 남부 지역의 빌딩숲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나무 데크가 아닌 구간이 또 있다. 웬만한 운동기구에는 다 갖춰진 일명 ‘산스장(산과 헬스장을 합친 신조어)’이다. 기다란 밧줄에 매달려 온몸을 뻗는가 하면 무거운 역기를 번쩍 들어올리는 등 ‘무림의 고수’ 같은 노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널찍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쉼터에 앉아 간단한 요기를 할 수도 있다. 이곳에 여유롭게 앉아 방문객을 구경하는 것도 묘미다. 가벼운 차림으로 데크 위를 달리는 사람, 속도를 맞춰 걷는 반려인과 반려견, 어깨 위에 앵무새를 엮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다.

흔히 등산길 초입이나 끝자락에 화장실이 있는 것과 다르게 안산 자락길에선 중간중간 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 출출함을 달래줄 곳도 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카페사업단 ‘커피피지기’의 푸드트럭이 산복도로 옆 쉼터에서 매일 문을 연다. 차고 따뜻한 음료는 물론이고 수제 샌드위치가 준비돼 있다.

안산은 ‘아낌없이 주는 산’으로도 통한다. 옛 이름이 모악산(母岳山)으로 ‘어머니의 산’이라는 뜻이다. 이름처럼 모든 보행약자를 보듬고 높지 않은 곳에서 멋진 전망을 내어준다는 이유에서다. 친절한 이정표를 따라 쭉 돌아나오는 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 초록으로 몸과 마음을 채우고 나오는 길,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런 명품 숲길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K**

이근하 기자

이색적인 ‘명품숲길’ 10곳



인제 자작나무숲

- 소재지 강원 인제군 인제를 원대리 산75-22
- 길이 5km

2022년 탐방객 분산 목적으로 추가 조성된 숲길로 30선 선정 당시 ‘최우수 숲길’로 꼽혔다. 작은 계곡부에 조림된 자작나무숲을 즐길 수 있다.

수모르 편백숲길

- 소재지 제주 용강동 산14-1번지 일원
- 길이 8km

한라산 자락 해발 600~700m에 위치한다. 원시 식생을 관찰할 수 있으며 오랜 세월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백양산 나들숲길

-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산98-1 일원
- 길이 31.5km

완만한 경사가 특징이다. 등산 초보도 오를 수 있는 코스로 마련돼 산을 좋아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비슬산 둘레길

- 소재지 대구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산85-1
- 길이 3.5km

담소 전망대, 실소 전망대, 폭소 전망대, 박장대소 전망대 등 고 송해 선생이 명명한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다.

만수산 무장애 숲길

- 소재지 인천 남동구 만수2동 산1-2
- 길이 2.8km

해발 201m 정상에 무장애 전망대가 설치돼 있다. 연간 약 50만 명이 찾는 곳이다.

연인산 명품계곡길

- 소재지 경기 가평군 가평읍 송안리 산114 일원
- 길이 4.7km

국민이 제안한 숲길 중 1위다.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간 선녀탕, 솟가마터 등을 볼 수 있고 징검다리과 출렁다리 등을 거닐 수 있다.

제주교래자연휴양림 꽃자왈 숲길

- 소재지 제주 조천읍 남조로 2023
- 길이 3km

화산이 폭발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다들여지지 않은 바위와 나무가 형클어져 거친 느낌을 준다. 성인 기준 1000원의 입장료가 있다.

계족산 황톳길

- 소재지 대전 대덕구 장동 485
- 길이 14km

임도 측면에 황톳길이 조성돼 휴식과 자연 탐험이 가능한 길이다.

소리향기 길, 명언읽고가길

- 소재지 경기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 길이 3km

청각을 자극하는 완경사지의 길이다. 명언읽고가길에선 위로가 되는 글귀, 시 등을 읽을 수 있다.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 소재지 충북 제천시 모산동 산3-1
- 길이 7.54km

비룡담 주변 일원에 꾸려진 무장애 숲길이다. 산림치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수능 끝! 전주로 도서관여행 떠나볼까



전주시립도서관이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주 도서관 여행' 이벤트를 연다.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 수험생을 무료로 초대하기로 한 것.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미리 신청하고 여행 당일 현장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무료로 도서관 여행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국 도서관 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10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8주년 기념행사 중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현장사례 공모'에서 '전주 도서관 여행'이 현장사례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전주시는 전주한지와 완판본 등 전주의 출판 기록문화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특화도서관을 건립하고 책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행이라는 콘텐츠와 접목한 '책의 도시'를 여행하다.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2021년부터 운영해왔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9개의 상시 프로그램으로 매주 운영되며 2023년에만 101회 여행에 1372명(9월 기준)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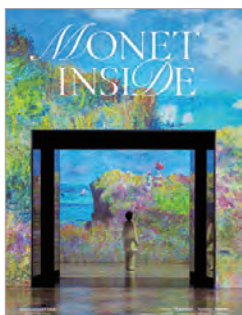
기간 12월 2~16일 신청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



연극 템플

연극 '템플'은 자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된 템플 그랜딘의 학창시절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었다. 그가 주치의의 도움으로 마운틴 컨트리 고등학교에 입학해 칼락 선생님을 만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모습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20주년 기념 작품이다.

기간 12월 15일~2024년 2월 18일 장소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크 1관



전시 모네 인사이드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가 남긴 명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미디어아트 전시다. 프랑스 항구도시 르아브르의 캐리커처 화가로 시작해 지베르니의 '수련' 연작 대서사시에 이르기까지 고단한 일상의 순간에도 한 줌의 빛을 찾아낸 클로드 모네의 찬란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

기간 11월 26일까지 장소 그라운드시소 명동



도서 전지적 푸바오 시점

엄마 아이바오의 사랑스러움과 아빠 러바오의 장난끼 많은 성격을 물려받은 푸바오는 국내 최초로 자연분만한 판다로 태어날 때부터 주목받았다. 2024년 봄이면 소유권을 가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더욱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20년 차 사육사이자 푸바오의 영원한 작은 할아버지 '송바오' 송영관 작가는 푸바오를 향한 애정에 보답하고자 사진 에세이집을 냈다.

저자 송영관 외(위즈덤하우스)

다큐멘터리 '무경계' 진재운 감독 국립공원 22곳 장엄한 풍경 담아 “자연과 인간은 하나임을 알게 되길”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무경계'는 올해로 지정 55주년을 맞은 한반도 국립공원 22곳의 풍광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진재운 KNN 기획특집국장이 만들었다. 한반도에는 지리산과 설악산 등 18곳의 산을 비롯해 다도해·한려해상·태안반도 등 총 22곳의 국립공원이 있다. 영화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평생 물질을 하며 살아온 해녀, 산에서 약초를 캐는 심마니, 섬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90세 할머니 등이 국립공원 안에 함께 어우러진다. '무경계'는 2023 대한민국민영방송대회 최우수상, 2023 불교문화대전 특별상 등을 받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 시드니 영화축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홍콩 국제영화제, 프랑스 파리영화제 등 전 세계 우수 영화제에도 초청돼 K-다큐멘터리로 주목받았다. 부산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진재운 감독은 영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영화는 11월 30일 개봉한다.

국립공원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다.

국립공원에는 문화재나 인문학적 요소가 무궁무진하고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도 풍부하다. 외부인이 아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려 했다. 사람이 자연에 진심으로 감동하게 되면 나와 자연이 분리돼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국립공원을 매개로 자연이 전하는 '검손'과 '공존'을 알리고 싶었다.

해외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영화를 통해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알린 것 같아 기쁘다. 여태껏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한반도 국립공원 이야기와 가치가 주목받는다면 세계인을 감동시킬 'K-다큐멘터리의 시대'도 열리지 않을까?

1995년 방송기자로 시작해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다.

나는 시골 출신이다. 환경오염과 자연이 파괴되는 걸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하지만 1분 30초짜리 영상에 메시지를 담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생각해냈다. 방송에서는 '물은 생명입니다', '해파리의 침공' 등 다큐를 만들었고 2003년부터 영화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10초의 영상을 위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5시간을 촬영한다. '무경계' 속 소백산 연화봉을 스치는 운해를 찍기 위해 산에 다섯 번 오르기도 했다.

제목에 '무경계'라고 지은 이유는 뭔가?

흔히 '자연에 압도된다'라는 표현을 쓴다. 사람이 자연에 정말 감동을 받으면 숨이 멎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나면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영화를 관통하는 이미지는 물이다. 섬은 바다 속의 산 같고, 안개 낀 산은 꼭 바다 같다. 자연과 인간, 산과 바다처럼 우리가 구분해 생각했던 것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을 제목에 담았다. **K**

유슬기 기자

[illegible][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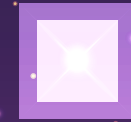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A photograph of a long, straight path lined with trees displaying vibrant autumn foliage in shades of orange, yellow, and red. The path is covered with fallen leaves, and a bench is visible on the left side. The scene is captured from a low angle, looking down the path towards a distant building.

홍대욱 경남 양산시 소주동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3.11.23.(목) - 11.25.(토) | 부산 BEXCO 제2전시장 1층



www.govexpo.kr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023.11.1.(수) ~ 12.15.(금)

가을철 산불발생의
약 52% 입산자 실화

산불 예방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